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노동자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발신: 김남희 복지조세팀장 02-723-5056 / 김은정 경제노동팀장 02-723-5052)

제 목 [보도자료]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처리 합의 규탄 기자회견

날 짜 2018. 08. 20. (총 4 쪽)

보 도 자 료

적폐법안, 생명안전공익 위협법안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처리 합의한 국회 규탄 기자회견 개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물

혁신성장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사후규제'식의 무모한 입법 안 돼

국민적 합의·충분한 논의 없는 비민주적 법안 처리 행태 규탄

일시 장소 : **08.20. (월) 13:00,**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최근(8/17)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등 규제개혁 관련 3개 법안을 병합하여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함.
-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의료·보건, 환경, 개인정보,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어 입법이 저지되어 왔음. 게다가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내용은 물론, 추진과정 또한 '정경유착'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음.
- 법안 자체가 지니는 문제가 심각함으로 인해 19대 국회 및 20대 상반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노동·시민사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어 온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정기국회도 아닌,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임.

- 국민적 합의에 이르지 않은 각종 규제완화 법안을 충분한 토론과 신중한 검토 없이 처리 여부부터 합의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에 다름 없음. 게다가 그 근거와 실효성도 불분명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사후규제'식의 무모한 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
- 이에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등은 여야 3당의 국민적 합의나 충분한 논의 없는 비민주적 법안 처리 행태를 규탄하고,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우려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처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함.

2. 개요

- (행사)제목 : "적폐법안, 생명안전공익 위협법안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처리 합의한 국회 규탄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년 8월 20일(월) 13:00, 국회 정문 앞
- 주최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노동자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 참가자 및 발언 (내부 사정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규탄발언 1 :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 규탄발언 2 :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규탄발언 3 : 배재홍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총괄본부장·경제민주화넷
    - 규탄발언 4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활동가
    - 규탄발언 5 : 최재홍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 규탄발언 6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붙임1 : 기자회견문

▣ 붙임1

기자회견문

적폐법안, 생명안전공익 위협법안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처리 합의한 국회를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규제프리존특별법(‘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하 ‘규제프리존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안(이하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하여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보건의료, 환경, 개인정보보호, 사회적 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하여 제정된 현행 법들을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 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시민사회,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해 왔으며, 특히 지난 박근혜 정권 하에서 재벌 대기업들이 최순실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입금하면서까지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던 대표적인 재벌특혜, 정경유착의 결과물이고 적폐법안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 또한 특정 지역에서 공익적인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자리에 모인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촛불혁명의 힘으로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합의하여 이러한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합의를 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재벌특혜법이며 시민의 안전, 생명, 개인정보를 위협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규정하여 특정 지역에서 규제완화를 허용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 생명, 환경보호 등 침해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공익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법령상의 관련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 또는 불합리한 경우’라는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기업의 실증특례를 허용하여, 기업 스스로가 규제완화의 안전성을 입증하면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고 있는바,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을 보면 투자이익이 중요한 기업에게 안전성 입증을 맡길 경우 시민의 안전, 생명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규제프리존특별법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분야에는 생명, 안전과 직결된

보건의료 분야, 환경보호 분야, 개인정보보호 분야가 망라되어 있어 충분한 공익심사 없이 규제가 완화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도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공익을 훼손할 위험이 있고 대기업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거의 유사한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과 병합해 처리하기로 합의하기까지 하였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심사주체를 기획재정부에서 중소기업벤처부와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변경하였으나, 충분한 공익적 심사 없는 규제완화라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 특히 규제완화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아 무분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규제완화 신청을 민간기업이 직접 지자체와 함께 신청하도록 하여 기업의 규제완화 민원을 손쉽게 처리하여 주는 법안임이 더욱 명백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주장하는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에 맞서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촛불혁명을 통해 적폐 보수 정권을 탄핵하고 구성된 정부 하에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규제프리존특별법, 그리고 그와 유사한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 통과에 합의하는 것은 정권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회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 처리를 당장 중단하라!
- 국회는 박근혜 정권과 정경유착의 결과물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당장 폐기하라!
- 국회는 규제완화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2018년 **8**월 **20**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노동자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